

김영록 지사 “남해안남부권 메가시티 지원을”

문재인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

안전 논의·전남 미래성장 동력 지역 현안 건의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회의의 안전을 논의하고, 전남의 미래성장 동력이 될 지역 현안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재인 대통령, 김부겸 국무총리 및 주요 장관, 김영록 전남지사

를 비롯한 시·도지사, 시·군·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이날은 자치분권 2.0 시대가 개막하는 날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명실상부한 지방의 국정참여 통로로서 저출산·고령화 등 중앙과 지방이 직면한 시대적 과



김영록 지사는 토론 자리에서 2단계 재정분권 추진, 지역소멸대응기금 신설

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플랫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 ▲지역경제활성화 ▲초광역협력현황 및 계획 ▲자치분권 성과 및 과제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이어졌다.

김영록 지사는 토론 자리에서 2단계 재정분권 추진, 지역소멸대응기금 신설

등 지방 재정분권을 크게 진전시킨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며, 지역 핵심현안인 ‘남해안남부권 메가시티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남해안남부권 메가시티 프로젝트와 관련, 김 지사는 “환태평양의 관문에 위치한 남해안남부권, 광주·전남 및 부산·울산·경남은 수도권에 대응하는 초광역거점으로 도약할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벨트, 우주산업벨트, 탄성소재산업벨트 등으로 영호남의 화합을 넘어 국가발전

도, 먹는 치료제 364명분 확보

전남도는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인 화이자사 파스리비드 투약을 14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도입 물량은 1차 투약분으로 전남도는 364명분을 확보했다.

전남도는 지난 12일 22개 시군과 합동으로 투약 대상자 확정부터 문진, 처방, 조제, 배송 등 경구용 치료제가 적시에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일체 점검을 마쳤다.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큰 환자에게 우선 투약할 방침이다. 주요 대상은 재택치료자와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중 경증·중등증 환자로, 65세 이상과 면역저하자다.

경구용 치료제는 국내 임상시험을 통해 입원 및 사망이 88% 감소 효과를 보였다.

전남지역 30개소 관리의료기관에서 처방을 통해 지정된 약국에서 조제하며, 보건소 담당자가 환자에게 약을 전달한다. 복약지도는 담당 약사가 비대면으로 실시한다.

도, 농산물 선별시설 공모

전남도가 농산물 상품성 향상과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올해 신규사업으로 10억 원 규모 농산물 선별시설을 지원하고, 지원 대상자 선정 공모에 들어갔다.

공모 신청기한은 오는 27일이다. 신청 대상은 전남에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생산농가, 농업법인이다. 법인의 경우 1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어야 한다. 농산물 생산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농협이나 유통사업자는 참여를 제한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산물 선별기 구입, 노후 선별기 교체, 선별장 신축비 등 개소당 최대 2억 원을 지원한다. 총사업비의 10% 범위에서 물류비, 상품 브랜드 개발비, 포장비 등으로 쓸 수 있다.

지원을 바라면 관련 자료를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김영민 기자

기초보장제도 선정 문턱 낮춘다

광주시, 일반·금융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 등 완화

광주시는 올해부터 법정 지원을 받지 못하고 생활이 어려운 관내 비수급 취약계층을 위한 ‘광주형 기초보장제도’의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13일 밝혔다.

광주형 기초보장제도는 실제 생활은 어렵지만 정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선정 기준에 맞지 않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관내 취약계층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마련한 제도다.

1월부터 광주형 기초보장제도를 신청한 자는 완화된 기준에 따라 수급 가능 여부를 조사해 지원한다.

완화된 기준을 보면, 수급권자 일반재산 기준은 1억3,500만 원에서 1억6,000만 원 이하로, 금융재산 기준은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하로 완화했다. 생계급여 월지급액은 기준중위소득 인상분을 반영해 지난해 대비 5.02% 상향 지원한다.

부양의무자 가구별 연소득과 일반재산이 각각 연 1억 원(월 834만 원), 9억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광주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로 책정돼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해당 가구의 실제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주거용 재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해 나온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30%(1인 가구 기준 58만3,444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합하면 생계급여 수급자로 책정해 지원하고 있다.

반면, 광주형 기초보장제도는 정부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탈락·중지된 가구 중 재산의 소득 환산없이 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50%(1인 가구 기준 97만 2,406원) 이하, 일반재산이 1억6,000만 원 이하(금융재산 포함), 금융재산이 3,000만 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이 연 1억 원, 9억 원을 초과하지



임용장 수여식 김용집 광주시의장은 13일 오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전입자 21명에게 2022년도 상반기 정기인사에 따른 임용장 수여식을 가졌다.

않으면 지원이 가능하다.

생활이 어려워 광주형 기초보장제도를 신청하고자 하는 가구는 언제든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 후 신청할 수 있다.

류미수 시 사회복지과장은 “광주형 기

초보장제도 선정 기준 완화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도 탈락·중지한 가구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그

간 보호받지 못했던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기철 기자

“방역물품지원금 신청하세요”

시,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17일부터 1차 접수

광주시는 오는 17일부터 각 구청 홈페이지에서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6일 방역패스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방역 패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16개 업종 소기업·소상공인이며, QR코드 확인용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등 방역 관련 물품 구매 비용을 업체당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한다.

1차 지급신청은 17일부터 2월 6일까지이며, 중소벤처기업부 보유 데이터베이스(DB)로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 확인이 가능한 소기업·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힘든 소기업·소상공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온라인 접수 방식을 도입하고, 중기부가 보

유한 DB를 활용해 신청 서류를 최소화했다.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은 영업장 소재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해 12월 3일 이후 구입한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만 제출하면 사업체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접수 초기 신청자가 집중돼 온라인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어 17일부터 26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별 10부제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17일은 사업자등록번호가 7로 끝나는 사업체가 대상이다. 27일부터 2월 6일까지는 번호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1차 지급 대상 사업체는 구청, 교육청 등 관계기관에서 문자로 안내받으면 지정 날짜에 신청하면 된다.

2차 지급신청은 2월 14일부터 25일

까지로, DB로 확인이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이 대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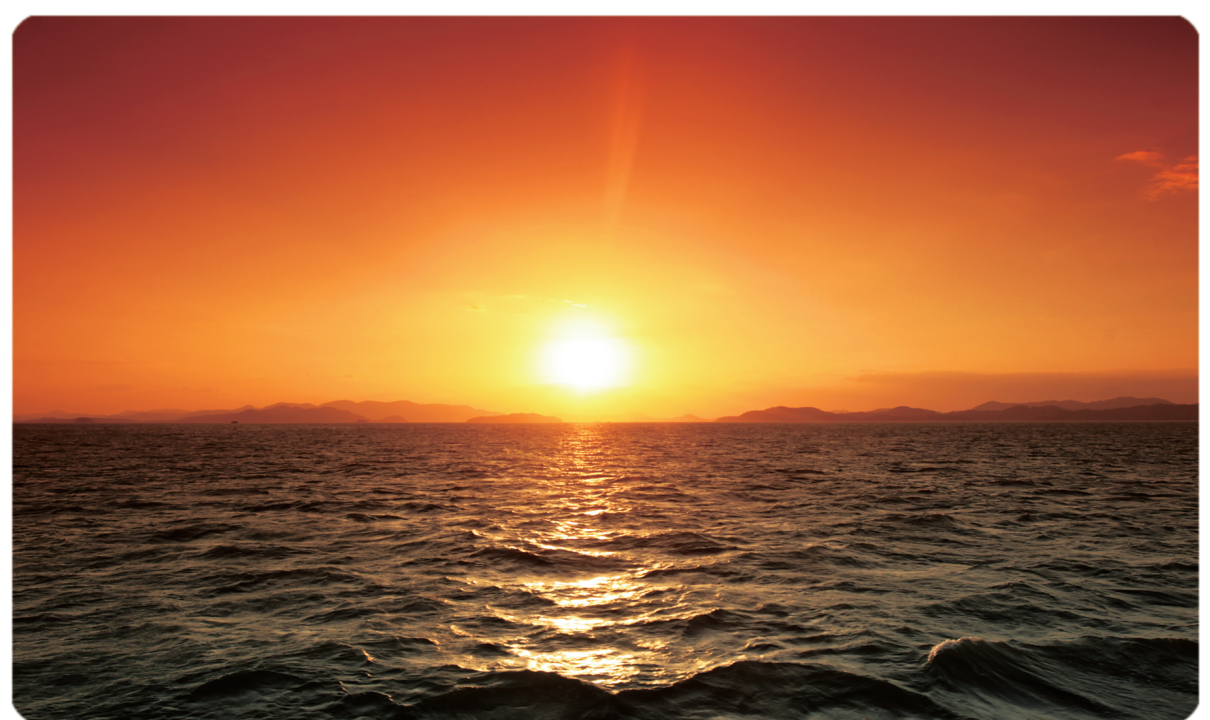
방역 패스 의무 도입 시설을 운영 중이지만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정확히 기재하지 못해 중기부가 보유한 DB에 포함되지 않아 문자를 받지 못한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별도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들은 2월 14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확인 지급 기간에 신청하면 되는 데, 중기부 DB에 관련 자료가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 사본과 구매 영수증 등을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 방법과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14일부터 시·구청, 중기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승규 시 민생경제과장은 “지난해 12월 3일 이후 방역물품을 구입한 지역 지원 대상 소상공인들은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한 후 구매 영수증만 제출하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다”며 “빠짐없이 신청해 지원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치분권 2.0시대 순창군의회가 군민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임인년(壬寅年) 대망의 새해를 맞아 군민 여러분 가정에
희망과 기쁨이 가득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마음 모아 기원드립니다.



순창군의회

56039 전라북도 순창읍 순창읍 경천로 33
Tel. (063) 650-1021, 1043 Fax. (063) 652-6782
http://www.sunchancouncil.go.kr

정기 브리핑

소병철, 여순사건법 유족회 의견 반영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사진)은 13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법’) 시행령에 유족회와 시민단체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해 사실상 확정됐다고 밝혔다.

여순사건법은 지난해 6월 29일 국회 20년의 정력을 넘어 소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 단 1년여 만에 사실상 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했다.

소 의원은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법시행을 앞둔 시점까지 시행령 등 후속 조치를 마련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소 의원은 “여순사건법의 유사 과거사 법인제주 4·3법은 총 24번이나 시행령이 개정된 만큼 여순사건법도 전향적인 시행령 마련이 필요했다”면서 “법제처와 행정안전부가 유족회와 시민단체의 시행령 의견을 적극 검토해 수용한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여 “향후 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개정이 필요하거나 부족한 부분은 시행령과 조례 개정을 통해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적극 협의할 것이다”며 “사건 발생 73년이 지난 만큼 여순사건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 그리고 합당한 대우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강병은 기자